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47
----------	------

발의연월일 : 2024. 11. 20.

발 의 자 : 권영진 · 주진우 · 윤한홍
엄태영 · 조정태 · 정성국
박정하 · 이만희 · 강명구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법」의 개정)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6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로 한다.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

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7항 중 “수거·반품 및”을 “수거·반품하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를 “지정 절차, 업무 범위 및 제7항에 따른 시정 조치의 기준”으로 한다.

제5조(「도로법」의 개정)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6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정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8조(「주차장법」의 개정)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① ----- ----- ----- ----- <u>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이착륙장) ① ~ ⑥ (생략)	제25조(이착륙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착륙장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	⑦ ----- ----- ----- <u>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6개월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u> -----.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u>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 ----- ----- <u>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개월</u>

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70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이내의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p><u>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p> <p><u>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p> <p><u>⑦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p>	<p><u>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생략)</p> <p>③ <u>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u></p> <p>④ <u>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u></p> <p>⑤ <u>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⑥ <u>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u></p>	<p>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 ⑥ (생략)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u>수거·반품</u>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 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 ----- ----- <u>수거·반품</u> 하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u>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 ----- <u>지정 절차, 업무 범위 및 제7항에 따른 시정 조치의 기준</u>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④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

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강제금”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50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⑤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제50조
의2에 따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
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
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생략)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 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 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 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u>일정기간</u>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 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 ----- ----- ----- 6개월 <u>이내의 기간을 정하여</u>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32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 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 告)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 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 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 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 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 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 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삭 제>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생략)

<삭 제>

<삭 제>

④ (현행 제7항과 같음)